

국민의견 수렴 · 조정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

< 회의 개요 >

- (일시/장소) 2026.2.26.(목) 14:00 ~ 16:00 /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(413호)
- (참 석 자) 공동위원장, 전문위원회 위원 등 총 7명 * 권수영, 김훈호, 정재석 위원 불참
- (회의주재) 김유환 공동위원장
- (주요내용)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
국가교육발전계획 의견수렴 추진 관련 논의

□ 주요 논의 사항

①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

- ※ (개정안 내용) 1안 : 5만 명 이상으로 완화, 2안 : 3만 명 이상으로 완화
- 5만 명 개정안의 경우 국회와 같은 국가기관 사례와 동일하여 근거가 될 수 있으나, 3만 명 안은 근거가 약한 문제
 - 현행 기준(10만 명)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 필요
- 동의자 수 완화에도 요건 충족 사례가 적을 수 있으므로 보완책 및 홍보 전략 필요
 - 요건 미충족 시에도 동의자 수가 일정 수 이상(예: 1만 명) 도달한 경우 전문위에서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, 본위원회에 의견수렴을 제안하는 방안 검토
 - 국민참여위원회, 국가교육발전계획 등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적극적 홍보 추진
 - 국회 청원 내용 중 교육 관련 의제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
- 동의자 수 5만 명 미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견수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필요
 - 법률에서 위임받은 동의자 수 규정 이외의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, 근거 규정이 없어도 검토하여 추진 가능

☞ 국민동의 요건을 5만 명으로 완화하되, 일정 수준 이상 동의자 수 달성 시 단계별 절차를 검토·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·운영하고,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 고시에 반영 추진

② 국가교육발전계획 의견수렴 추진 논의

< 시안발표 전·후 의견수렴 관련 >

- 시안 발표 전(성안 과정)과 발표 후(대응)의 의견수렴은 성격이 다르며, 시안 발표 전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므로 면밀하게 설계될 필요
- 시안 발표 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, 이 과정을 통해 의제별 대응 논리 준비 가능
-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국참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숙의 토론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
- 시안 발표 전 국참위 토론이 중요하므로 국참위의 집중 숙의를 시안 발표 전으로 앞당겨서 실시
- 예산과 시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문위, 특별위 등에서 도출되는 쟁점 중심으로 사전 토론을 집중하여 실시

< 의견수렴 설계 관련 >

- 중장기 전문위와 각 특별위원회가 의제별 의견수렴 방식을 제안하고, 의견수렴 전문위가 제안된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 추진
- 이해관계자 분석, 논의의 경과(역사) 등 갈등관리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, 의제별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방식을 검토할 필요
- 각 전문위, 특별위에서 의제별 쟁점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의견수렴 전문위에 공유할 필요
- 쟁점이 공유되면 이해관계자 집단 분석 및 갈등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의견수렴 디자인이 가능할 것
- 총론 성격의 국가 미래 비전과 교육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, 대안 논의 후 국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필요
- 의견수렴 관련 절차 설계, 숙의 과정 및 행정절차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

③ 차기 회의 안건 관련
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 관련 논의

□ 향후 계획

- 제12차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전문위원회 개최 : '26.3.19.(목) 16시